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 들여다 보니

‘이사보수 과다-사외이사 독립성 훼손’ 이유 “반대”

스튜어드십 도입 후 사전 공시 확정

대한항공 회장 연임 의결 방향 관심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사전 공개했다. 공개한 23개 상장사 중 절반 기업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13일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14일부터 20일까지 주주총회를 여는 2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공시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총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공개해 왔다. 수탁자책임전문위 전신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 안건 중에서 의결권전문위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만 주총 전에 공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이 투자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총안건에 대해 주총 전에 찬반 의결권을 사전 공시하기로 확정했다.

사전 공시 대상은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기업’이나 ‘국내주식 자산군 내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의 전체 주총안건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이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공시한 기업은 총 23개사다. 이 중 11개사의 1개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다.

우선 국민연금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감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한 상장사는 LG하우시스, LG상사, 한미약품,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현대위아, 신세계, 농심, 풍산 등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이사 보수한도액이 성과에 비해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고, 신세계, 한미약품 등이 제시한 사외이사 후보는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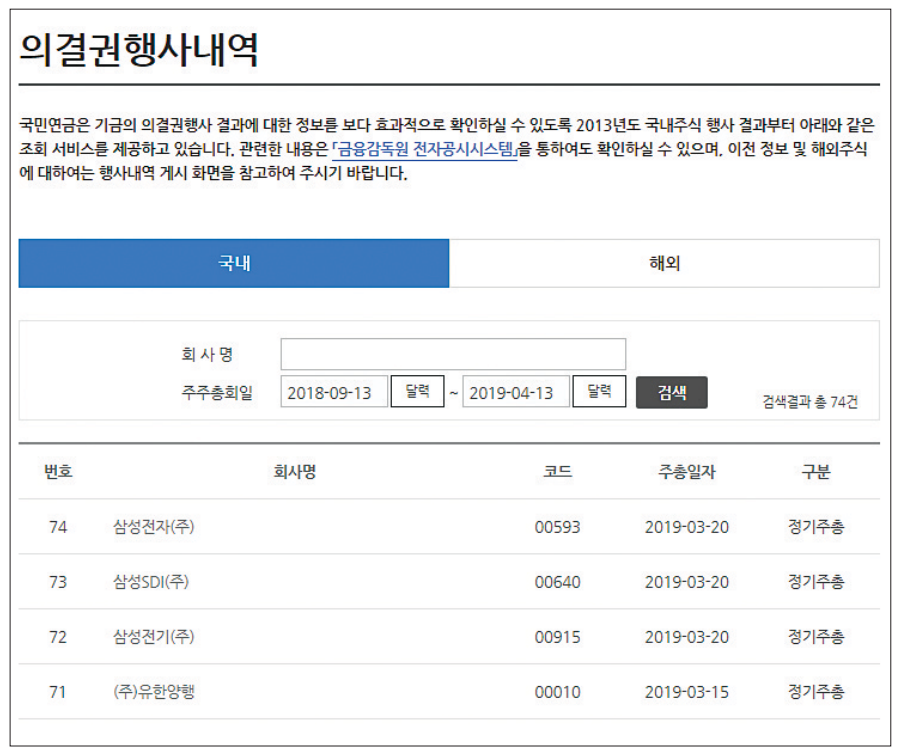
반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그룹 계열사가 제시한 정기주총 안건에는 모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27일 열린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2864건의 안건 중 80%가 넘는 2309건의 안건에 찬성했고, 539건(18.8%) 안건에 반대했다.

특히 반대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중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5건(0.9%)에 불과했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 644조원을 굴리면서 ‘주총 거수기’역할을 하는 ‘종이호랑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의결권행사내역

국민연금은 기금의 의결권행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2013년도 국내주식 행사 결과부터 아래와 같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전 정보 및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행사내역 게시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 해외

회사명

주주총회일 2018-09-13 달력 ~ 2019-04-13 달력 검색

검색결과 총 74건

번호	회사명	코드	주총일자	구분
74	삼성전자(주)	00593	2019-03-20	정기주총
73	삼성SDI(주)	00640	2019-03-20	정기주총
72	삼성전기(주)	00915	2019-03-20	정기주총
71	(주)유한양행	00010	2019-03-15	정기주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공시 내역.

주총 키워드는 ‘의장 분리’… 효율성은 “글쎄”

이사회 독립, 악재로 효율성 의심

경영계 “운영 실용성 떨어질수도”

본격적인 기업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한 가운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가 재계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의장 분리가 기업 투명성 제고 등 본 목적 외에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주총 트렌드…‘이사회 독립’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주 주총을 실시하는 기업은 120개에 이른다. 유가증권시장 85개사, 코스닥시장 35개사다.

최근 재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사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표이사직과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는 양상을 보인다. 삼성전자에 이어 SK그룹 등도 투명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의장을 따로 두고 기업을 운영 중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표 등이 지난달 22일 ‘금융지주회사법’·‘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정관 변경으로 사외이사도 이사회 의장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의장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훈 경영지원실장이 맡고 있다.

SK그룹 지주사 SK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임 규정을 최근 폐지했다. 최태원 회장은 정관 변경에 따라 이번 정기 주총 후 의장직에서 물러난다.

LG그룹은 ‘구광모 체제’ 출범 후 첫 정기 주총에 돌입한다. 상장 계열사 12곳 가운데 9곳이 오는 14~15일 정기 주총을 실시한다. 지난해 실적 승인과 함께 계열사별 ‘이사회 독립’ 관련 안건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사회 독립은 재계 전반에 확산하는 분위기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분리할 경우 최고경영자(CEO)는 경영진을 대표해 기업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이사회 의장은 경영진을 감시·감독하는 기능에 충실한다. 또 이사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통해 반복되던 ‘거수기’ 논란도 잠식할 수 있다.

◆당·정도 등 돌린 마당에… 이사회까지?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공정경제’를 빌미로 기업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 총수 등 최대주주 권한을 축소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대기 중이다. 대부분이 최대주주나 기업 총수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일반주주의 권한을 향상한 법안이다.

검찰과 ‘재계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대기업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거나, 총구를 겨냥한 대기업은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갑질근절과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 명목으로 기업을 옥죄는 모양새다. 자산총액 2조~5조원 사이 기업과 조사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기업을 타깃으로 올려놓고 예의주시 중이다.

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수위는 높아지고 있고,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에 따른 일반주주의 의안 직접 제시도 늘어난 상황이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 투자차익만 노린 수법도 우려된다.

◆이사회 독립, 기능 충실할까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는 이사회 독립에 대해 “기업 전체에 대한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 기업 운영에 있어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교수는 “총수가 의장을 맡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과 함께 바로 의결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평소 기업 내부의 민감한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주총에 혼란을 주거나 경영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경우 경영진은 주총에서 의장과 이사회에 사업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